

“새만금 잼버리, 생태문명 선진국 알리는 계기”

인터뷰 - 송하진 도지사

2일 서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고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역사적 위기마다 인류에게 힘이 됐던 연대 의식과 인류애, 협력과 소통, 계몽주의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최 포부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행사로서 세계잼버리의 의미에 대해서 송지사는 “앞으로 우리는 인류 생존을 위해 인간과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새만금의 깨끗한 생태환경과 대한민국의 첨단IT기술이 어우러



2일 서울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게 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생태문명의 출발과 생태문명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지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준비요인으로 ▲사업수

“역사적 위기마다 연대 의식·인류애 협력·계몽주의적 가치 확산해 나갈 것”

“조직위 준비·운영 정부지원위 구성 범국민적 축제 승화 성공적 준비요인으로”

행 주체인 조직위원회의 세밀한 준비와 운영 ▲법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 발굴

활용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범국민적 축제 승화 ▲인택트 시대에 적합한 잼버리 붐 조성방안 발굴 ▲부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을 꼽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잼버리 때 활용될 유스호스텔, 상설야영장, 스카우트박물관, 체험 활동장 등의 시설은 행사 후에도 존치, 활용하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을 추진해 새만금을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항구적 거점이자 레저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잼버리 개최 이후 활용방안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잼버리 개최 효과가 전북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발굴도 중요하다”며 “특히, 전북의 강점인 생태관광명소와 전통문화 시설, 건강 먹거리 등을 준비해 전북관광의 세계화를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윤덕 의원,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당초 행사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열렸다. 김윤덕 신임 조직위원장 외에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윤덕 조직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언제나 스카우트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계스카우트연맹 대원, 지도자 여러분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우리 세상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 스카우트대원들이 스스로 세계잼버리를 만들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2023년 청소년의 신대륙 새만금에서 마음껏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12년 묵은 정읍 현안 해결 첫 출발 끊다

민주 윤준병 의원,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당 지역위, '월영습지 대체편입' 안건 총괄협의회에 제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읍의 12년 묵은 현안 사업으로서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를 향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지역협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을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의결해 총괄협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은 향후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편입' 안건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안건을 심의할 총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정하는 절차가 진

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내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장저수지의 추가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휴식·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의 정읍시 토탈랜드 조성 사업, 내장상가 정비, 내장 리조트 단지의 숙박 시설 건축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면서, 교통접근성 및 연계 강화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12년 묵은 정읍의 핵심 현안 사업이며 정읍시민들께서 반드시 해결을 원하는 숙원 사업이다”라며,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처리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대상 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수사, 검찰총장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문수사지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

추미애 법무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지문단(수사지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지시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지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지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지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고, 오는 3일 심의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집 하루 전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었다. 구속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그해 10월12일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시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